

“농수산대 확장, 전복서”

도의회 의장단, “정원 증원, 역할·기능 확대 등” 요구 허 총장 “분교 추진 없어” 전복서 추가 부지 검토 시사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과 송지용 부의장, 이명연 공공기관유치지원특위 위원장,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은 24일 한국농수산대학을 방문해 “향후 한국농수산대학 정원 증원과 캠퍼스 확장 등이 이뤄진다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복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장단은 이날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과 신용광 교수부장 등과 만나 “정치권에서 혁신도시 추가 이전 계획이 제시된 이후 타 시도는 유치 기관을 모색하고 있는데 반해 전복은 이미 이전한 기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전복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1호 공약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 벨리

조성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허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장단은 특히 “농업지식기술인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복을 농·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분교 운운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저하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임과 동시에 전북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용역이 분교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원 확대 등 기능 및 역할 강화 등 한국농수산대학의 모든 발전

방안은 전북혁신도시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앞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농수산대학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태웅 총장은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분교 추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학생 정원을 40% 증원하고, 실습시설 등을 늘려왔다”며 “지원자도 늘고 있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공동체 유지 등을 위해 농·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분교 운운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저하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임과 동시에 전북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용역이 분교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원 확대 등 기능 및 역할 강화 등 한국농수산대학의 모든 발전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 없어야’

김광수 의원,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 발의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생활영역에서 차별과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비장애학생과의 실질적인 평등교육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게 하고,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4일,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로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8년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을 비롯해 고용,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당국 역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 통합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에 대한 부정

적 인식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교원 또는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로 나타나는 등 장애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명시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과 제한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참전유공자 박덕환씨와 악수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로 참전용사 헌신에 보답”

문 대통령, 6·25 참전 국군·유엔군 유공자 오찬... 역대 정부 ‘최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역대 정부 최초로 6·25 전쟁 국군·유엔군 참전 유공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연을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국군 참전 유공자 141명과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군·교포 참전용사 37명 등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182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외부 호객이 아닌 영빈관에서 참전 용사들과 오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군은 3군 의장대 180명이 도열한 가운데 군악대의 연주로 청와대를 방문한 참전 용사들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고등참전용사와 가족분들을 외부 행사장에서 뵙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청와대에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고 애국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주시는 모든 참전용사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6·25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함께 전쟁의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인류의 역사”라며 “대한민국은 유엔의 깃발 아래 함께 했던 195만 영웅들의 헌신을 변함없이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진정한 길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늘 건강하게 평화의 길을 응원해주시고 우리 국민들 곁에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 당시 프랑스 대대에 배속돼 화살머리고지 전투에 참전한 박동하 선생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나의 전우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낭독했다.

박 선생은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후 당시 배내도록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전우의 시신을 수습하던 때를 회상하며 최근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소식에 기대감을 밝혔다.

미군 아전 지휘관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고(故) 김영욱 대령의 이야기도 소개됐다.

한인 이민자 2세인 김 대령은 미군 사상 최초의 유색인 아전 대대장으로 2차대전에 참전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에 재입대해 한국에 파견됐다.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해 한국과 미국에서 무공훈장을 받았다. 유색인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011년 포털사이트 MSN이 발표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영웅 1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쟁 후에는 고아들을 보살피며 봉사활동에 헌신했다.

이 밖에도 학도병으로 영덕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유병추 선생, 간호장교 박옥선 여사,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경찰 화랑부대 고(故) 임진하 경사 등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도 조명됐다.

미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에 참가한 조셉 W. 벨란저(89)씨는 “한국

의 발전상이 놀랍고, 흥남철수작전에 참가했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니 감회가 남달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찬 행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박한기 합참의장 등 한미 양국의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청된 참전 유공자들에게 대통령 서명 시계와 건강식품을 선물했다. 또 참전용사의 이름을 새긴 카드를 동봉해 감사의 표시를 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참전용사의 용기와 애국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뉴스

트럼프, 29일 방한 30일 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30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경제활력·국민안전 추경... 7월부터 집행대야”

이낙연 총리, 국회 시정연설 여야3당 국회정상화 합의 자유한국당, 추인 불발 문희상 의장, 6월 국회 내달 19일까지 진행 가결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4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불

참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이날 국회정상화에 합의했으나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불발되면서 2시간 만에 합의가 무효화됐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결국 오후 5시37분께 본회의를 열었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처리가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 처리가 많이 늦어져서 아쉽다. 심의와 처리가 더는 지연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 총리의 연설이 끝난 뒤 6월 국회를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 간 일정으로 진행한다는 안건을 가결했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평안을 주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예수병원은 121년 동안 생명을 지켜온 사랑으로
희망의 내일을 열어 갑니다.
환자경험 중심, 수준 높은 진료환경으로 행복을 키우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가 거쳐 받았으니 거쳐 줄 수 있게 하옵소서』
1897년, 예수병원 설립자 마티 잉골드 일기

549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대표전화 063.230.8114 고객센터 063.230.8181 응급의료센터 063.230.8282